

개인정보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마지막 매듭

관리주체 전문성 키우고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 제고해야

김성수 기자 korseep@kh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우리학교에서 실무부처, 학생회 등 정보관리 주체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학교가 2019년도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서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분야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이에 정보관리 주체가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알리미 공시에서는 ‘양호’ 실무 행정의 섬세함은 ‘미흡’

우리학교 정보보호 시스템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 강의학습 시스템 ‘KLAS’와 지난 9월 새로 만들어진 ‘경희톡’부터 허점이 존재했다.

정보보호 학술동아리 ‘쿠리그’의 이준오(기계공학 2016) 씨는 “KLAS와 경희톡에서 따로 허가받지 않고도 학번과 같은 개인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다”며 “심지어 예전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로그인 정보 유지를 위한 ‘쿠키 값’에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우리학교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정보처에 제보해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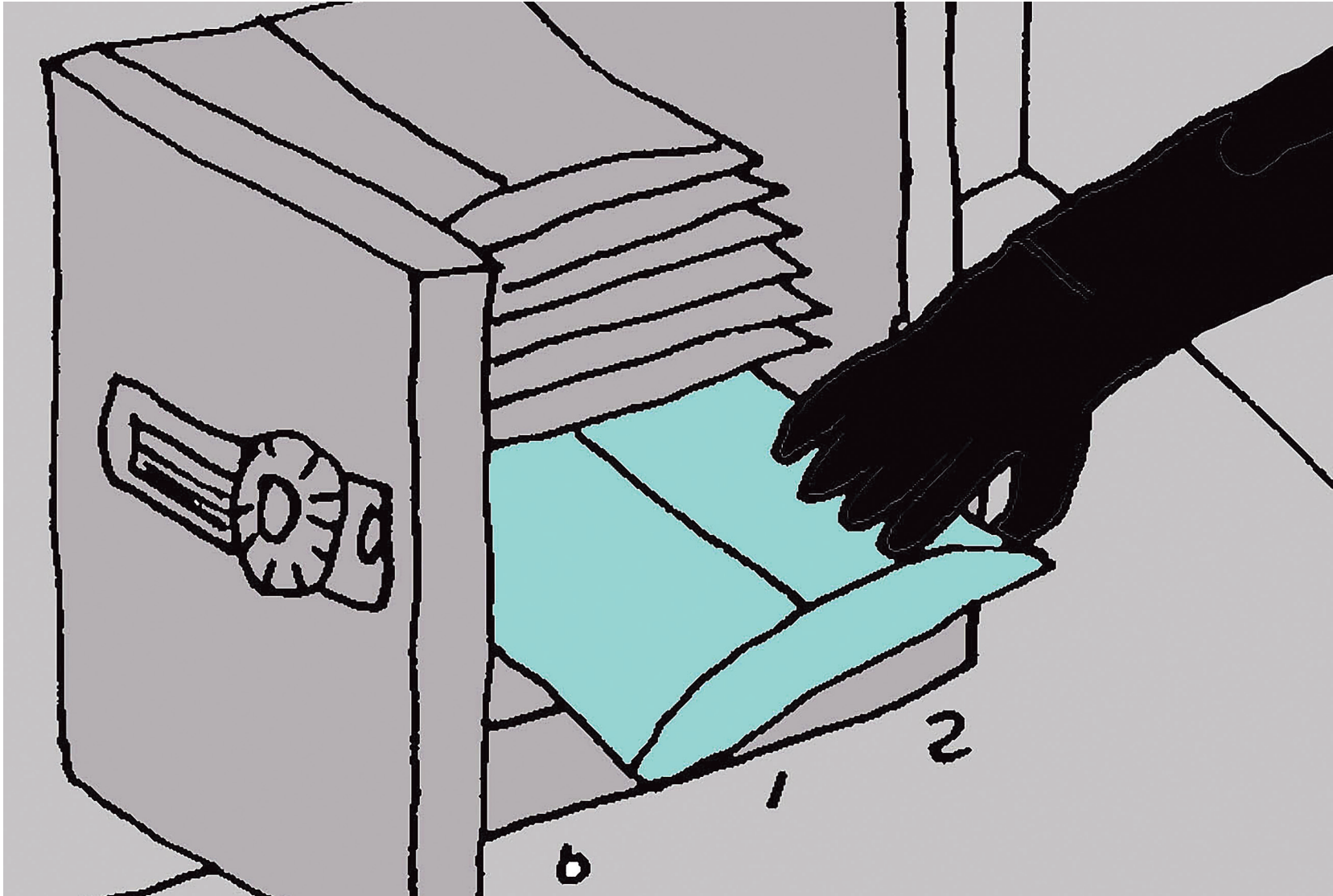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융합대학(SW대학)에서 정보보안 연구를 담당하는 허의남(컴퓨터공학) 교수는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취약점 개선을 위한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온라인 신청 게시판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사례도 있었다. A단과대에서는 장학 신청을 위해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A단과대의 장학신청서류에는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본 정보와 함께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A단과대 행정실 측은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장학금 수령 액만큼 세금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이유에서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서류를 살펴보면 세금 공제에 대한 법률 안내와 ‘동의함’에 체크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우리학교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 정보를 서류에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행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고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실명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는 사례도 있었다. B장학을 신청하기 위해 장학 게시판에 신청서를 업로드 한 K씨는 “장학 신청을 위해 작성한 게시물에서 실명이 공개돼 당황스러웠다”며 “지난 학기에 이름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다”



정보 보안은 관리 주체의식이 형성될 때 완성된다.

(사진 = 중앙일보 DB)

고 말했다. 실제로 B장학 게시판의 ‘글쓴이’ 목록에서는 신청 학생의 실명, 학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게시물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제캠퍼스 정보처 정보기획팀에서 개인정보관리를 담당하는 허웅 직원은 “해당 부서에 관련 법률 근거 및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며 “목적 외의 불필요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면 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에 벗어나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도·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 신상정보 유출 심각

우리학교에서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학번·점수 형태의 전체 학생 성적 공지 방식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유진(컴퓨터공학 2016) 씨는 “성적 공지를 출석부 명단 순서로 정렬해서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름이 아닌 학번으로 공지됐다 하더라도 누구의 점수인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W대학 허의남 교수는 일률적인 성적 공지가 아니라, 각 학생마다 고유한 비밀번호인 ‘비공개키’를 받아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허 교수는 “공개된 정보에서 유출될 수 있는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게시판에서 실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값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야 하는 것은 정보관리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이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는 정보관리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종합해보면 실무부처, 학생회와 같은 정

보관리 주체의 부주의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3월 C단과대 행정실에서 진로상담교수배정을 위한 안내 메일에 학생들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엑셀파일이 함께 송부됐던 사례가 있었다. 이후 행정실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 사과문과 함께 파일 삭제를 부탁하는 메일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C단과대 학생 K씨는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상황에 대해 전달받은 후,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며 “후속 조치도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신입생 환영회(OT)에서 학생회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반복됐다. 지난 2월 D단과대 학생회는 동아리연합 단체 채팅방에 버스자리 배치를 위해 이름,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공지한 사례가 있었다. 또 E단과대에서는 OT 출석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사용하고 행사 후 이를 계속 강의실에 방치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제보를 남겼던 D단과대 동아리 임원진 L씨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발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학생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개개인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소수 인원의 사소한 부주의만으로 쉽게 유출될 수 있다. 실무부처, 학생회 등 정보관리 주체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다.

실무부처 직원들은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에는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도서관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

한 시행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학교보건법 등 담당 부처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따라 상이했다.

정보기획팀 허웅 직원은 “교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칙으로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시행세칙, 정보보안 규정이 존재한다”며 “최신 법령 내용을 반영해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활동보고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부처 팀장 S씨는 “직원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관련 규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S씨는 “정보보호 교육을 들어도 ‘내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기가 힘들다”면서 “딱딱한 규정보다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분석한 매뉴얼이 확립되면 직원들이 참고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매뉴얼 ‘경직’ 유연한 매뉴얼 필요

이러한 실무부처 직원들의 고충을 정보처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정보기획팀 허웅 직원은 “매년 진행되는 개인정보 교육에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실무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W대학 허의남 교수는 “정보보안은 정보보호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의 의식이 형성될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신뢰가 구축돼있고 담당자들은 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교수는 “담당자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